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2009년 특별호 1호

사회진보연대 발행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 02-778-4001~2 | www.pssp.org | pssp@jinbo.net

광범위한 해고와 임금삭감에 맞서

노동권·생존권을 쟁취하자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해고와 임금삭감

2009년 3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다. 이는 1998년 IMF 위기 당시 연간 경제활동참가율 62.5% 보다 2.1% 포인트 더 낮다. 자영업자 → 임시일용직 → 중소기업 순으로 실업이 확대되고 있고, 100만 실업시대가 현실화했다. 2008년 4/4분기에만 월평균 실질임금이 6.4%나 하락하였다.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자그마치 12.9% 하락했다.

이렇게 해고가 확산되고, 임금이 삭감되어 민중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임금삭감으로 귀결되고 말 일자리나누기로 버티자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에는 전혀 관심 없으면서 비정규직 법안을 개악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잔다. 늘린 일자리라고는 온통 노동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임시일자리 뿐이다(관련기사 3면). 이주노동자 숙식비를 임금에 포함시켜 실질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뜨리고,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노년층을 제외한단다.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려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것이다. 공공부문도 '고통분담' 하라며 임금 10% 삭감과 정원조정을 하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위기 해법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전 민중적 투쟁 전선을 세워야 한다

재벌들은 하청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노동비용을 관리해왔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전후해서는 이것이 더욱 확대되었는데, 사내하청, 외주화 등 하청연계망이 다변화했다. 재벌기업들은 여기서 실질적인 비용절감, 손실전가를 이루어낸다.

경제계가 최근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중소하청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서가 아니다. 재벌기업과 해외 초민족기업들의 손실전가를 원만하게 하기위해서다. 중소업체들에서 업체폐업과 그에 따른 고용불안이 확대되고, 임금삭감이 광범위하게 전개된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런 상황에서 총고용보장 투쟁이 이른바 '정규직 대기업 노조'의 고용보장 투쟁에 그친다면, 한국사회에서 민주노조운동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말 것이다. 하청연계망을 통한 손실전가방식에 대한 비판 없이는 노동자계급의 단결은커녕 궁극적으로는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립은 자신의 고용안정투쟁마저 위험에 빠뜨린다. 고용보장투쟁과 임금삭감 저지투쟁은 개별노조의 틀에 갇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의 투쟁태세다. 자신의 손실을 민중들에게 전가하려는 지배세력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양보 협상 전략으로 시간을 벌려하거나, 신자유주의에 무비판적인 시민운동진영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민중운동 단결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권이다

노동권이 부정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해고나 해고 위협이다.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높아지는 실업을 빌미로 노동권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일상화된다. 따라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막나가는 자본가들의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시적인 해고중단 및 고용안정 특별법'은 매우 유력한 매개고리가 될 수 있다.

2009년 최저임금투쟁은 과거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재벌들이 자신의 손실을 하청·용역노동자에 떠넘기려는 시도가 그만큼 제한된다. 임금삭감 시도 자체가 저지되는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삭감된 임금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은 노동자들이 함께 공동의 목표로 삼는 임금삭감 저지투쟁이 되어야 한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분쇄, 노동권·생존권을 쟁취하자!

5~6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투쟁을 조직하자.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노동자는 단결하여 책임전가 시도를 분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에 분명히 각인시키자. 이 투쟁의 성과를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의 초석으로 삼아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을 재건하고, 노동조합운동의 전면적인 혁신을 이루자. 자본주의의 위기를 넘어 대안세계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자. PS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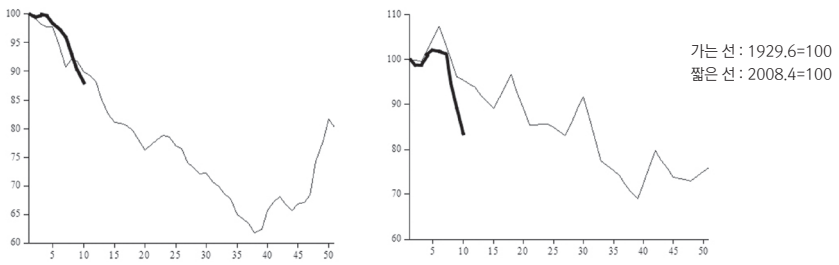
왜 한시적 해고중단 및 고용안정 특별법인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주들은 자신의 손실을 떠넘기는 데 혈안이 된다. 노동자의 노동권이나 민중의 생존권은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다. 더구나 다양한 하청용역 연계망과 신축적인 임금, 노동을 통해 해고와 임금삭감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경제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노동권과 생존권은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고용안정특별법 쟁취투쟁은 이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한시적 해고중단 및 고용안정 특별법' 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위기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첫째, 해고요건 엄격화(정리해고 조항 적용 한시적 유예). 둘째, 계약해지조건 엄격화(경제위기시기 계약해지 중단,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계약 해지 조건 및 사용자 책임성 강화, 하청 용역 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셋째, 파산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 승계(파산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정부지원을 통한 고용보장, 정부의 파산 기업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준하는 고용 승계 의무). 넷째, 정부지출 증대를 통한 고용 확대 (일자리 창출 및 노동권 보장). 다섯째,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확대(고용보험 지급기준 확대, 실업부조 지원 확대) PSSP

사회화와노동20090501.indd 1 2009-04-29 오후 8:58:21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대안세계화 운동



세계산업생산 세계무역량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야기될 손실규모가 4조 달러에 이를 것이란다. 미국 경제학자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과 오라워키(Kevin H. O'Rourke)에 따르면 세계적인 수준에서 산업생산과 교역규모의 축소는, 4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했던 1930년대 대불황 당시에 못지않다.

자본주의에서 구조적 경제위기는 과잉축적-이윤율 저하에서 비롯한다.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는 6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장기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윤율은 하락하고 성장률은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 80년대 초반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통해 중심부 일부 국가에서는 90년대에 이윤율과 성장률의 일정한 회복이 있기도 하였으나('벨 에포크', 즉 좋은 시절) 이는 전 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 개도국들의 빈발하는 외환-외채 위기를 대가로 하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몇 차례 거품이 생겨나고 붕괴되기를 반복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 산업에서의 거품형성과 붕괴가 있었고, 연이어 부동산 시장에 형성된 거대한 거품이 2007년부터 다시 붕괴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부동산 거품 붕괴는 일본 중국 등의 수출달러의 미국으로의 환류와 미국의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 속에서 작동되던 미국이라는 거대한 소비기계가 작동을 중단함으로써 그 영향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부실자산을 대량 보유, 자체 부동산 거품의 붕괴, 중동구 유럽국가들에 대한 과도한 대출 등으로 심각한 상태다.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수출국들은 급격한 수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중동구 유럽 국가들, 파키스탄, 터키 등 외환 외채 위기를 겪고 있는 개도국들도 문제가 심각하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위기가 1930년대 대불황과는 달리 미국경제의 장기 하강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극복이 더욱 어려울 것이고, 1930년대 대불황 이후 5-6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 같은 시기는 다시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2009년 1/4분기 한국경제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0.1%로, 2008년 4/4분기의 -5.1%(미국처럼 연율로 환산하면 -18% 수준이다)에서 급락세는 일단 멈춘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1/4분기 성장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것은 4/4분기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격히 더 낮았던 때문이기도 하고(기저효과), 대폭적인 환율상승(원화가치 평가절하) 등에 기초해 다른 나라보다 수출감소가 덜했고, 경기부양책으로 정부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도 하락하고 있고, 미국·일본·유럽경제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 한국경제의 상대적인 호전은 지속되기 어렵고 더블딥(이중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계 경제 전체의 회복이 가시화되어야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인데, "미국 헤게모니 아래에서의 세계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 규정에 따른다면 이런 시기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만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는 보신주의와 실리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안정적인 노자간의 타협체제(코퍼러티즘)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계급적 단결과 노동자, 여성, 농민, 빈민, 환경생태운동 등 제 민중세력들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세계를 열어나가야 할 시점이다. PSSP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의 투쟁

그리스, 청년봉기와 총파업의 불길이 타오르다

2008년 12월 6일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16세의 소년 알렉산드로스 그리고로폴로스가 시위 도중에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스의 청년들의 봉기가 이어졌고 12월 10일에는 그리스의 양대 노총이 24시간 총파업으로 화답했다. 카라만리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신민주주의당 정부는 2007년 9월 총선으로 출범했으나 연금 개악, 교육 개악,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해 노동조합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했었다. 4월 2일에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그리스 양대 노총이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에 항의하며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였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인 250만 명이 참가했다.

프랑스, 두 차례의 총파업으로 사르코지 정부를 코너에 몰아붙이다

프랑스에서는 2009년 1월 29일 전국적으로 250만 명이 참여한 총파업이 벌어졌고. 3월 19일에도 3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1월에 단행된 1차 총파업의 기세에 밀려 사르코지 정부는 총 260억 유로 규모의 복지수당과 저소득층 대책을 내놓았다. 노동조합들이 실업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조건에서 추가 대책을 요구했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2차 총파업이 조직되었다. 2차 총파업의 경우는 공공노조가 주도한 1차와 달리, 정유회사를 비롯해 자동차회사, 소매업체, 생활용품업체 노조 등 민간부문 대기업 노조들까지 속속 파업을 예고하면서 산업 전반으로 파업이 확산되었다. 2차 파업에 따라 프랑스 국영철도와 파리 교통공사의 노선 중 40~70%가량의 운행이 중단되었고 학교, 병원, 우체국, 은행 등도 파업에 동참하여 공공서비스도 중단되었다. 프랑스 내 여론조사 결과 80%에 육박하는 프랑스 국민들이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혀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총파업을 전개한 노동자운동 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260억 유로 규모의 부양책은 매우 미흡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유층에 세금 증액, 일자리 보장을 촉구했다.

세계 노동조합, G-20에 항의하며 런던시위를 조직하다

세계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2009년 3월 31일 세계 경제위기 문제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영국 런던에 모였다. 그들은 다섯 가지 주요 영역에 관한 요구를 발표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투자를 보장하며 세계 빈곤을 저지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라, ▲새로운 금융규제를 실시하라, ▲임금하락의 위험에 맞서고 지난 수십 년 간 동안 이루어진 불평등을 역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라, ▲IMF, 세계은행, OECD, WTO 등 세계금융경제기구의 개혁을 포함하여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창출하라. 런던회의에 참석한 70개 이상의 각국 노동조합과 국제 노동조합 참가자, 영국의 광범위한 사회운동 세력 수만 명은 이러한 요구를 담고 강력한 시위를 벌였다. 한편 시위 현장에서 숨진 톰린슨의 사인이 복부출혈에 의한 것이라는 부검결과가 나와 경찰의 폭력진압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 노동자운동의 선도적 투쟁으로 세계 노동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자

이외에도 영국, 스페인, 러시아, 헝가리 등 유럽 각지에서는 파업과 시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투쟁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노동자가 투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에서 조직될 노동자운동의 선도적 투쟁도 세계 각지의 노동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값진 투쟁의 씨앗이 될 것이다. PSSP

꿩 먹고 알 먹기?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해고도 은폐하고 노동신축화도 완성하고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경제위기와 더불어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대량 실직의 시작이 우려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상상하기 어렵고 80~90%가 해고되거나 아니면 교체사용이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정규직들의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명백히 현재의 쟁점을 호도하고 있다. 고용기간을 연장하든 안 하든 비정규직 계약해지는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에서 비정규직 해고는 계속 될 것이다. 실제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업에서는 3개월, 6개월, 10개월 등 초단기 계약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이다. 비정규직법의 애초 목표 자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노동신축화의 제도화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비정규직법을 마치 비정규직의 해고를 완화시킬 수 있는 법처럼 포장하여 현실의 해고 경향을 감추고 있을 뿐이다.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상황에서 지배세력들은 임금,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산시키면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한다. 이번 비정규직법 개악안은 이런 노동신축화를 관철시키려는 과정일 뿐이다. 그렇지만 노동신축화를 관철하는 핵심 토대는 바로 대량 해고와 임금삭감에 따른 산업예비군의 증대다. 따라서 현재의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막아내는 것과 더불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해고와 임금삭감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PSSP

최저임금 인상, 전 민중이 나서자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최저임금이 공격받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유예하려거나 기업이 이주노동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때 최저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등의 시도가 자행되고 있다.

최저임금 삭감은 여성, 이주, 비정규직 등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전체 노동자에게 고통분담, 임금삭감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미 노동자들은 물량감소로 인한 임금손실로 생존에 타격을 입고 있다. 기업 차원의 임금삭감 조치를 통해 자본의 손실을 분담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저임금마저 삭감된다면, 노동자들이 임금보전 또는 인상을 요구하며 자본의 손실 전가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재벌기업들이 하청계열화를 통해 손실을 전가하는 메커니즘 하에서, 최저임금은 재벌기업들의 손실을 어느 이상으로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없는 노동표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저지하고, 오히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투쟁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선 경제위기에 따른 자신의 손실을 원하청 구조를 따라 하청 용역노동자에 떠넘기려는 재벌 기업주들의 시도가 법정 최저임금액만큼 제한되는 의미가 있다. 둘째, 물 밀 듯 밀고 들어오는 임금삭감시도를 일정한 선에서나마 저지할 수 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은 그 자체로 각종 임금삭감으로 인해 유실된 임금을 회복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저임금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해고와 임금삭감에 맞서는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PSSP

노동권 없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얼마 전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844억 7,400만원의 추경을 확보해 19만 5천개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며 실업자가 늘고 취업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데 대한 저소득층 일자리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운동 단체들 역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라고 주목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서비스는 경제위기하에 얼마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등장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거나 노인을 돌봐야하는 가족과 특히 그 돌봄 노동을 전담하는 여성들에게 사회서비스 확충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민간시장에 맡기며 '권리'가 아닌 '돈벌이'로 만들었다. 이렇다 보니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상황은 말도 못하게 취약하다. 1년도 안 되는 단기계약직에 파트타임 형태, 사회보험 적용 안 되는 사례가 절반, 시간급을 받는다 해도 시간급 자체가 낮고 이 조차도 매달 수입이 들쭉날쭉하다. 또한 여성의 돌봄 노동을 이미 저평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돌봄 노동이 '사회화'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형태이다. 이렇듯 여성들을 대상으로 근로빈곤층을 대량 양산하는 일자리가 바로 정부가 말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를 일자리의 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 노동조건과 여성노동권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운동진영이 전체 노동자들의 해고를 방어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노동권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요구는 더욱 열악한 노동 상황을 만드는데 동조할 위험이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이 의미가 있으려면 여성이 수행하는 재생산노동에 대한 온전한 가치평가와 전반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 PSSP

용산 살인진압 100일

민중운동의 단결된 투쟁이 지속되어야

이명박 정권의 개발정책, 살인진압으로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 정권과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정책으로 여전히 도시 곳곳은 개발의 지뢰밭이다. 건설자본과 투기꾼들은 용역깡패와 폭력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삶터에서 쫓아내고 있다. 용산 살인진압에 대한 정권의 책임이 명백하지만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살인적인 개발정책 역시 계속되고 있다.

용산 살인진압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민중들의 저항을 '가차 없이 즉각 진압'하는 공안 통치 전략의 필연적 결과다. 이명박 정권의 개각 단행 직후, 공권력 과시용 진압으로 용산참사가 발생한 점은 이를 정확히 보여준다.

용산 살인진압에 맞선 투쟁은 최근 몇 년 약해진 민중운동의 단결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민중운동의 단결투쟁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결을 바탕으로 자신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 전가하려는 정권에 맞선 투쟁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PSSP

초민족자본에 대한 통제

노동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최근 대규모 정리해고, 임금삭감이 벌어지며 사회적 이슈가 된 사업장의 공통점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는 점이다. 쌍용자동차(2004년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 위니아만도(99년 국제 금융 자본 유비에스캐피탈이 인수), 파카한일유압(2005년 미국 파카하니핀 그룹이 인수), 지엠대우(2002년 미국 지엠 자동차가 인수) 등이 모두 그러하다.

이들 초민족자본은 헐값에 기업을 인수하여 이미 충분한 이익을 올렸기 때문에 해외 본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자본을 철수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초국적 기업들은 해외본사의 현금 확보를 위해 마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듯이 한국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성과물을 뽑아 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들 자본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다. 초국적 자본은 한국에서 세금 감면, 저금리 대출 등의 막대한 혜택을 입었지만 정작 자본 유출, 노동자 해고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위기 시기에 한국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이들 초국적 자본이 마음대로 '먹튀'짓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한다. 자본철수로 폐허가 되어버린 기업에서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벌이기는 더욱 힘들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예를 보면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전체 제조업 노동자의 8%에 육박하는 17만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연 124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제 쌍용자동차, GM대우, 파카한일유압, 위니아만도의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의 해고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정부에 초민족자본 통제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07-08년의 영웅적 투쟁을 만들었던 홈플러스(구 홈에버) 노동자들 역시 초민족자본에 맞선 투쟁에 합류해야 한다. 영국 테스코 자본이 인수한 홈플러스는 현재 영국 파운드화 폭락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조만간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초민족자본에 대한 통제는 초민족자본이 외환 시장을 통해 현금을 유출하는 것에서부터, 해외 본사와의 부당 거래를 통한 자산 유출, 각종 금융 기법을 이용한 투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해외자본 유치가 한국 경제의 미래인 양 선전하며 해외매각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만큼 정부가 현재의 사태를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현재 더 많은 금융시장 개방과 투기 자본 육성을 위한 정책인 자본시장통합, 금산분리 완화 등에 대한 반대 운동 역시 펼쳐야 한다. PSSP

쌍용차·GM대우 해법

노동권 보장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내자!

1998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초국적 자본에 매각된 쌍용자동차와 대우자동차가 다시 큰 위기를 맞았다. 쌍용자동차는 이미 상하이자동차가 경영을 포기하여 법정관리상태이고, 지엠대우는 지엠(GM) 본사의 위기로 진로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진보진영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 자동차 업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여 정부가 인수 혹은 일시적으로라도 유동성 공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엠대우, 쌍용자동차, 그리고 관련 산업의 노동자 입장에서 정부 지원이 무조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부분의 기업에서 회생의 전제 조건은 대규모 해고를 동반한 구조조정이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쌍용자동차, 지엠대우, 만도 등이 대부분 한 두 차례의 대규모 해고를 이미 겪었다. 정부의 지원은 고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부보다 친기업적인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해고에 관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할리는 없다.

특히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00년대의 자동차 산업은 최근 금융 거품이 꺼지면서 절반 이상은 거품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즉 자동차 산업이 현재와 같은 생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전제로 한 혹은 가정한 정부 지원 요구는 이후에 더 큰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들은 정부 지원만 이루어지면 열심히 일하여 자동차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등을 당연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한시적 해고금지 특별법 등을 통해서 해고와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파산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 고용을 승계하는 것은 물론, 초국적 자본의 자본 철수를 방지하기 위해 초국적 자본에게 고용 및 임금에 관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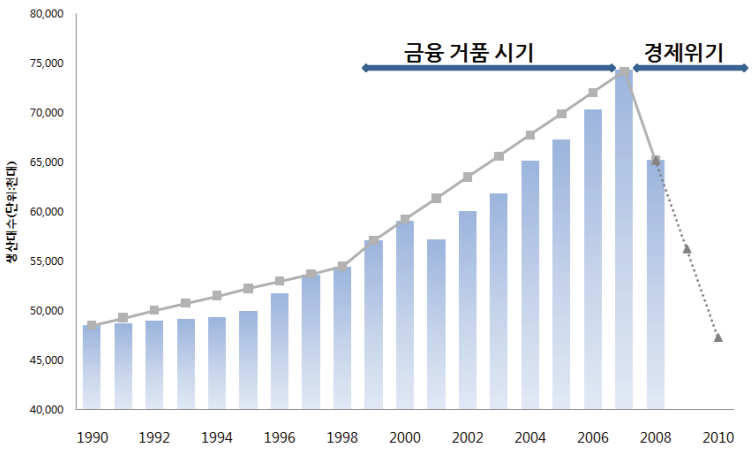
현재 경제 위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 과정이 아니라 1930년대 대불황 이상으로 깊고 긴 위기이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기업의 생사를 넘어선 노동자들의 생존에 관한 요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PSSP

"자본 유출·정리해고 중단, 초민족 자본 통제하라!"
"정부는 해외매각 책임지고,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라!"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자동차 산업 살리기는 가능한가?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살리기가 필요하다

세계 자동차 생산량



최근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쌍용자동차와 GM대우를 정부가 지원하여 새로운 자동차 회사를 만들자는 자동차 산업 재편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 산업 재편론은 우선 2000년대 자동차 산업이 거품 위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산업은 1990년대에 비해 3배 이상의 성장 속도를 보였는데,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금융 거품에 근거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연봉 1,000만 원의 노동자가 4,000만 원을 모기지로 빌려 5,000만 원 짜리 집을 산 이후에 집값이 1억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2,000만 원 정도의 자동차를 할부금융으로 산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장사를 가장 잘하던 곳이 지엠(GM)의 자동차 할부금융 및 모기지 금융 회사인 지맥(GMAC)이다. 그런데 2007년 말부터 집값이 폭락하며 이 모든 방식이 무너졌다. 집은 압류되고, 자동차 할부는 갚을 길이 없어졌다. 거품이 무너진 것이다.

자동차 시장이 다시 거품을 통해 성장할 수 없는 한 자동차 생산은 중단기적으로 최소 30%, 많게는 50% 이상 감산이 불가피하다.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던 만들지 않던 세계적으로 두 곳 중 한 곳이 망하거나, 전체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시장이 다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자동차 산업 재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잠깐의 희망이 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더욱 큰 해고 고통이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선택은 명확하다. 산업 전망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노동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내는 것이다. 고용과 임금에 관한 권리를 강화해 내 향후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 수 년 진행될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자동차 산업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살리기다. PSSP